

장기화되는 강제실향의 시대 : 인도주의를 넘어 지속가능한 투자로

2026년 07월 21일

김새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이 글은 2026년 6월 29일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이 개최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국제질서의 전환기, 유엔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시 묻다: 안보, 인권, 인도주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토론문 및 당일 토론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강제실향민은 1억 1,73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 70명 중 1명이 분쟁과 박해, 인권침해로 인해 고향을 등진 셈이다. 이 숫자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강제실향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인도주의적 사안에 머물지 않으며, 평화와 안보, 경제, 개발이라는 여러 층위가 서로 얽혀 있는 구조적 위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이주와 강제실향은 다르다

먼저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이동 중인 모든 사람인 인권과 존엄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가 보호하는 난민 및 국내실향민은 박해와 분쟁, 폭력, 인권침해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느껴 고향을 떠났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특별히 정의되고 보호된다. 국내실향민 역시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지만,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 머무르는 사람들이다. 반면 이주민은 일자리, 교육, 가족 결합 등 개인적 이유로 이동하며, 일반적으로 귀환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에 직면하지 않는다, 모든 이주민이 난민인 것은 아니며, 이 구분은 통계상의 분류를 넘어, 국제사회가 이들에게 어떤 보호와 책임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전 세계 강제실향민의 71퍼센트는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가 수용하고 있다. 자원이 가장 부족한 많은 국가들이 큰 규모의 실향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이는 수용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제실향은 단순한 인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더 넓은 국제 평화와 안보 의제와도 맞닿아 있다.

숫자 이면의 복잡한 현실

최근 전체 강제실향민 규모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수치를 단순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감소분의 상당 부분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으로의 귀환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귀환이 항상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강제실향 상태의 장기화다. 동아프리카 사례에서는 실향 상태가 평균 16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 식량·주거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세대를 이어가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바르함 살리가 강조하듯이, 너무 많은 난민들에게 실향은 생존을 위한 피난처로 시작되지만 평생 지속되는 현실이 되고 있다. 난민의 교육과 고용, 경제적 자립, 그리고 이들을 수용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서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다.

축소되는 자원, 흔들리는 현장

문제는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에, 이를 뒷받침해야 할 자원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데 있다.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핵심 공여국들의 지원이 최근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그나마 남은 지원도 과거의 유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용도로 지정된 지정기여금 형태로 바뀌는 추세다. 이는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유엔난민기구의 재량을 상당히 제약한다.

그 결과는 조직 운영과 현장 서비스 양쪽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한 해 인력을 대폭 감축했고, 올해도 추가로 줄일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위한 인력과 공간이 축소되고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긴급구호에서 자립 지원으로

이러한 재정 여건의 변화 속에서 유엔난민기구는 생명을 살리는 긴급구호 중심의 접근에서, 난민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접근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자 한다. 이는 유엔난민기구 단독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공여국과 개발기구, 인도적 지원기구는 물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민간부문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전환이 가능하다.

먼 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의 투자

강제실향 대응은 흔히 먼 지역의 자선 활동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분쟁의 확산과 지역 불안정, 경제적 취약성, 그리고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을 완화하는 투자에 가깝다. 이는 한국의 장기적 안

보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제한된 자원으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들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유엔난민기구 인턴들 다수는 난민 관련 시민사회 활동을 계기로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20여 년의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제기구가 채용에서 실제로 중시하는 것은 지원자가 지닌 전문성과 목적의식이다. 구체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야말로, 진입장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다.

강제실향의 시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줄어드는 자원 속에서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는 “50 by 35 비전”을 통해 2035년까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장기 실향 상태에 있으며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난민 가운데 절반 이상(약 800만 명)이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해결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전환은 국제기구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공여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